

주간 통일정세

2014-33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외무성 "UFG 군사적 대응 더 높은 단계서 취할 것"(8/18, 연합뉴스)
 - 북한은 1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난하며 그에 대처한 군사적 대응이 "예측할 수 없는 보다 높은 단계에서 취해질 것"이라 경고하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핵전쟁연습들이 계속되는 한 그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 대응도 연례화, 정례화될 것"이라고 강조함.
 - 이어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에서 한해에도 몇 차례씩 그 규모와 범위를 늘려가며 벌이는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용납 못 할 범죄행위"라고 주장함.

- 北 외무성 "UFG 군사적 대응 더 높은 단계서 취할 것"(8/24,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 리영길 군총참모장이 24일 선군절을 하루 앞두고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보고자로 나서 UFG 연습으로 "조선반도의 정세가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침략의 무리들을 단매에 죽탕쳐버릴 전투준비를 갖추고 최고사령관의 최후 공격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리 총참모장은 24일 오후 조선중앙TV로 녹화중계된 보고대회에서 "미제와 남측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백두산 총대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며 "혁명적 무장력은 진짜 전쟁 맛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함.
 - 중앙보고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참석했으며 김기남 당 비서가 사회를 맡음.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무자비한 철추 안길 것"(8/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평화와 긴장완화 노력에 대한 난폭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UFG 연습에 대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린하고 북남관계를 해치는 용납 못할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비난함.
 - 특히 북한의 핵과 대량파괴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관련해 "내외호전광들이 연습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 적용하겠다고 떠들어댄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대한 핵전쟁 선전포고"라고 주장함.

- 北, "南, 관계개선 안중에도 없어"(8/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정세 파국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은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주장함.
 - 덧붙여 "우리가 적대세력의 광란적인 핵전쟁 도발 책동에 강위력한 군사적 억제 조치로 맞서나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우리의 정의로운 자위적 조치들은 이제부터 연속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또 신문은 19일 '핵에는 핵으로, 전쟁에는 전쟁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미국이 UFG 연습을 앞두고 B-2 전략폭격기 3대를 밤에 배치한 점에 주목하며 "B-2 전략폭격기의 목표는 어디인가. 그곳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이라고 강조함.

- 北, "선전매체로 남북관계 개선해야"(8/19,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9일 '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는 제목의 글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의 영도 따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기어이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김일성 주석의 노작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 하자'가 발표된 지 22주년을 맞았다며 통일 3대원칙(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거론함.

- 北, "선제타격은 정당한 권리"(8/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무자비한 선제타격은 정정당당한 권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호전광들의 핵 선제타격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응은 그에 앞선 무자비한 선제타격이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도발자들은 얻어맞아도 할 소리가 없다"라며 "일단 우리가 때리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구실 없이 얻어맞아야 하며 우리가 결심하면 침략의 본거지들은 불바다가 되고 잣더미가 돼야 한다"고 비난함.
 - 이어 "핵무기는 더 이상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핵과 전술로켓을 비롯해 도발자들을 일격에 쓸어버릴 무장 장비들을 완전무결하게 갖추고 있다"고 강조함.

- 北, 남북 간 분야·분과별 교류기구 복원 촉구(8/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북남합의들은 전쟁광신자들의 농락물이 아니다' 제목의 글에서 "북과 남이 이미 이룩한 합의들은 북남관계 개선의 이정표"라며 "북남합의들을 전면 이행하고 6·15통일시대에 활성화되어온 분야별, 분과별 협력교류기구를 되살리면 북남관계는 저절로 개선되게 된다"고 주장함.
 -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환경, 민생협력 등을 거론하면서 "지금과 같이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가 최악의 형편에 이른 조건에서 그것이 과연 실현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함.

- 北, UFG 연습 비난 지속... '물리적 조치' 위협(8/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전쟁광신자들의 구차스러운 녀두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UFG 연습을 '방어적 훈련'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 "어떻게 하나 긴장격화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모지름(고통을 견디려고 모질게 쓰는 힘)을 쓰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23일 '합리화될 수 없는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이라는 글을 통해서도 UFG 연습을 비난하고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 수 없다"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구함.

- 北, UFG 연습 계속 비난... "南 매국행위의 산물"(8/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핵 재난을 몰아오는 침략자와 매국노의 공모결탁'이라는

- 제목의 논평에서 UFG는 미국이 남한을 "영구 강점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측이 "미국의 기도에 놀아나고 있다"고 비난함.
- 논평은 "UFG와 같은 군사적 도발로 조선반도를 최대의 열점 지역으로 만들고 '평화수호'의 간판 밑에 남조선 강점을 영구화하자는 것이 바로 미국의 목적"이라며 남측의 UFG 강행은 "북침 야망을 위한 매국매족적 망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함.
 - 논평은 "우리의 증오, 분노를 총대로 보여주려는 혁명무력의 결심은 이미 단호한 실천단계에 진입했다"며 "정벌의 불소나기는 도발자들과 그 아성을 단숨에 잿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위협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北 신문, DJ 5주기 맞아 남북 정상회담 부각(8/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민족대단결의 화원에 펼쳐진 광폭정치의 송고한 화폭'이라는 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했다고 소개함.
 - 신문은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해내외(국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을 하나로 굳게 묶어 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뜻과 애국의 의지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에 의해 그대로 이어지고 빛나고 있다"고 주장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북한대표단 인천AG 조추첨 참석차 입국(8/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9일 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이 인천아시안게임 조추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한다고 전함.
 - 뉴스에 따르면, 양성호 조선체육대학장 등 8명은 베이징발 중국남방항공 315편으로 19일 오후 10시10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임.

- 北, 인천AG 선수 150명 등 선수단 273명 파견 통보(8/2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2일 북한이 다음 달 열릴 인천아시안게임에 273명의 선수단을 보내겠다고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고 전함.
 - 뉴스에 따르면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이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조추첨 및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을 통해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 150명을 포함한 선수단이 참여할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은 북한 올림픽위원회 손광호 부위원장 명의 서한을 우리측에 전달해 왔다"고 밝힘.
 - 아울러 북측은 선수단 파견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는 문서 교환방식을 통해서 협의하자고 제의했고, 우리 정부도 이를 수용했다고 뉴스는 전함.
 - 한편 김 대변인은 북한 선수단·응원단의 체류비용 지원 문제에 대해 "국제관례만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국제관례와 남북 간에 이루어졌던 몇 차례 선수 파견 관례도 함께 고려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 정부가 전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함.

- 韓美 UFG 합동연습 진행 및 맞춤형 억제전략 적용에 "값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등 위협(8.19,평양방송·중앙방송)
- 남한 당국이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등 軍內 '인권유린만행'장본인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호 두둔하고 있다며 이는 "집권위기를 몰아오게 될 것"이라고 "심판"지속 주장(8.19,중앙통신)
- 韓美 UFG 합동연습 강행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안중에도 없는 남한 호전광들의 극단적인 대결의식의 산물'이라며 "우리의 자위적 조치들은 이제부터 연속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8.19,중앙통신·노동신문)
- 대통령의 「광복절(8.15)」 경축사를 "중전의 대결적 입장되풀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UFG 합동 연습 중단, 보안법과 5.24 조치 해제 및 남북공동선언 이행 결단'을 촉구(8.19,중앙통신·민주조선)

- UFG 합동군사연습 진행 관련 '미국이 남조선 당국을 사촉해 북침을 가상한 군사연습을 뻔질나게 벌여놓고 있는 것은 관계개선의 기회를 가로막고 우리(北)를 해치려는 술책'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외세의존 정책을 버리고 남북관계문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 '주한미군 철수 및 反美투쟁' 선동(8.20, 중앙통신·노동신문)
- 외교부 장관의 '북핵 위협에 대응한 국제공조' 발언들 관련 '조선반도 정세와 북남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외세와 작당하여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피를 물고 날뛴 괴뢰패당의 사대매국행위의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8.20, 중앙통신)
- UFG 합동군사연습 진행 관련 '韓美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핵 공갈이 계속 되는 한 군사적 대응행동은 연례화, 정례화될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보다 높은 단계에서 취해질 것'이라고 재차 위협(8.20, 중앙통신)
- 우리 국방부의 '병영문화 혁신방안'(가혹행위 신고 포상 등) 발표에 대해 "본질을 빼버린 허망한 방안"이라며 '진정한 해결방안은 김관진 역도를 비롯한 책임 있는 자들부터 법정에 끌어내는 것'이라고 주장(8.21, 중앙통신)
-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등 남북합의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의 신성한 재보"라며 남한 당국이 "북남합의들을 외면하고 그 실천을 거부하는 것은 민족반역행위"라고 '남북 공동선언 이행' 주장(8.22, 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北, 美 국무 북한인권 발언 비난...“우리식 대응”(8/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케리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병적인 거부감과 체질적인 적대시 정책의 가장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사가 18일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대변인은 케리 장관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앞두고 북한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 제도가 군사적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는 국제적 인식을 축적해 저들의 군사적 위협을 합리화해보려는 정치적 기도(시도)"라고 주장함.
-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8/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美 국무장관의

'북미관계 완화'의사 표시와 '북핵 및 미사일위협과 인권문제' 비판 등에 대해 '갖은 권모술수로 인류를 기만 우롱해 온 미국의 체질적인 위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라며 '미국이 평화와 인권을 입에 올리는 것은 어불성설의 극치'라고 비난 및 '유치한 가면극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라'고 충고하였다고 전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특이사항 없음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北 "UFG, 판문점 도끼사건 연상케 해"…미국 비난(8/18,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18일 '북침전쟁 도발을 위한 고의적인 음모책동'이란 제목의 방송에서 "판문점 사건은 미국의 계획적이고도 고의적인 음모 책동의 산물"이라며 미국의 북침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함.
 - 특히 18일 시작된 UFG 연습을 언급하며 "미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조선반도에서 언제 전쟁이 터지겠는가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함.
- '핵에는 핵으로, 전쟁에는 전쟁으로'(8/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미국의 B-2 전략폭격기 3대 괌도 전진배치는 '핵선제공격의 反北 전쟁을 도발하려는 것'이라며 "우리(北)는 미국과 맞설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핵무력 보유 및 계속 강화' 위협이라고 주장함.
- '한시바빠 주한미군 철수 결단'을 주장(8/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한미군은 우리(北)의

첫째가는 타격대상"이라며 이를 위해 '現 주한미군 기지들을 가상하여 세운 타격물들에 대한 로켓 발사훈련 등을 진행 했다'고 주장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北 "한일병합조약은 국가테러"...日에 '죄의식' 촉구(8/22,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한일강제병합 104주년(8월 29일)을 앞둔 22일 한일병합조약을 일제의 '국가테러행위'로 규정하고 일본이 가혹한 식민통치에 대해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함.
 - 신문은 22일 '조선 침략을 노린 일본의 특대형 국가테러행위'라는 제목의 글에서 "참으로 한일합병조약은 일제가 무력과 강권을 총발동해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특대형의 국권강탈행위였으며 국가테러의 극치였다"고 주장함.
- 北 "우키시마호 사건은 집단살인...日 사죄해야"(8/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우키시마호 사건 69주년인 24일 '영원히 수장될 수 없는 살인범죄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 사건은 일본의 '의도적인 조선인 학살계획'이라며 일본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함.
 - 이어 "오늘까지도 일본 당국이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사죄와 배상·진상 규명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일본은 하루빨리 과거 청산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스웨덴 안전 및 개발정책연구소 대표단(단장: 니콜라스 스반스트롬 소장), 8월 18일 평양 도착(8.18, 중앙통신·중앙방송)
- 총련 사이다마현 상공회 대표단(단장: 황운해 회장), 8월 18일 평양 출발(8.18, 중앙통신)
- 앙골라 의사협회 대표단, 8월 18일 귀국(8.18,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 대표단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주코브스키에서 열린 무기박람회 '2014 오보론 엑스포'에 참가(8.19, 자유아시아방송(RFA))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 한봉희 「총련」 부국장), 8월 19일 귀국 (8.19, 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 돗토리(鳥取)현 사카미미나토(境港)시의 나카무라 가쓰지(中村勝治) 시장 21일 북한 방문(8.21, 교토통신)
- 美 국회 및 對北 전문가들 속에서 '對北 전략적 인내정책 비판과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對北 정책전환' 촉구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길밖에 없다'고 '핵무력 확대강화' 지속 강조(8.22, 중앙통신·노동신문)
- 총련일꾼대표단(단장: 허명도 총련중앙상임위 부국장), 8월 23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연덕 김父子동상 참배(8.23, 중앙통신)
- 日 총무상 등 아베 내각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8.15)에 대해 '지난날의 제국시대를 부활시키려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국제사회의 한 성원으로 살어나갈 수 있는 길은 어지러운 과거와 결별하는 것'이라고 주장 (8.24, 중앙통신·노동신문)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연풍호 과학자휴양소 건설현장 시찰(8/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평안남도의 명승지 연풍호에 건설 중인 과학자휴양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 통신은 황병서, 마원춘, 김정관이 동행하였으며 제267군부대 군인들이 맡고 있는 연풍호 휴양지 건설은 며 현재 완공 단계에 들어섰다고 전함.
- 北 김정은, 완공된 조선인민군 제621호 육종장 현지지도(8/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완공된 북한군 제621호 육종장 현지지도에서 "연구사업 방향을 바로 정하고 생활력이 강하면서도 증체율이 높은 집짐승들을 더 많이 육종해 내고 널리 퍼뜨리며 여러 단위들에 선진축산기술을 보급하고 과학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지시한 것을 소개함.
 - 황병서(軍 총정치국장, 차수), 김정관(인민무력부 부부장, 육군 중장) 이 동행하였으며, 새 집에 입사한 백성진, 윤성희 가정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기념촬영한 것으로 전함.
- 北 김정은, 軍 식품공장 시찰·생산환경 개선 강조(8/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식품공장인 '11월2일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작업반을 돌아보고 자동화·무인화된 생산공정에 만족감을 표시했고 원료공급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생산환경의 무균·무진화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목표를 내걸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등이 동행함.
- 北 김정은 "아버지 필체 배우려고 많이 노력했다"(8/24, 조선예술,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24일 입수한 북한 월간지 '조선예술' 최신호(7월호)에 실린 '만경대 가문의 혁명사상과 명필체'라는 제목의 글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과 거의 똑같은 필체를 갖게 된 연유에 대한 김 제1위원장 본인의 말을 소개함.
 - 이 잡지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장군님(김정일)의 필체인 백두산 서체를 따라 배우기 위하여 많은 품을 들였다고, 장군님께서도 내가 쓴 글을 보시고 자신의 필체와 신통히 같다고 하셨다고 말씀하였다"고 밝힘.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박봉주(내각총리), 대안친선유리공장(평남 대안군) 현지요해(8/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박봉주 총리가 규격별에 따르는 판유리와 열선반사, 강질 유리생산실태 등을 알아보고 협의회에서 갖가지 유리제품들을 국산화하는데서 기업소가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능력확장 공사를 다그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한 것으로 전함.

다. 공식 행사

- '선군절(8·25)' 54주년(8/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선군절(8·25)' 54주년 경축 여맹원들의 시와 노래무대를 김정순(여맹 중앙위 위원장)·김진하(평양시당 비서)·현상주(직총 중앙위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회관에서 진행하였다고 전함.
- '선군절' 54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8/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선군절' 54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24일 김영남·박봉주·리영길(보고)·현영철·김기남(사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4.25문화회관에서 진행하였다고 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백두의 혁명전통은 선군조선의 영원한 생명선이다(8/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김일성·김정일로 계승된 "백두의 혁명전통은 당과 혁명의 역사적 뿌리이고 선군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라며 '김정은 영도따라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최후승리를 향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北 "간부들, 특혜 바라지 말고 겸손해야"(8/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온 사회에 사회주의 도덕 생활기풍이 차 넘치게 하자' 제목의 글에서 "일꾼(간부)들은 언어생활의 문화성을 높이고 그 어떤 특전, 특혜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인민의 충복답게 언제나 예절 밝고 겸손해야 하며 군중과 기쁨도 아픔도 함께해야 한다"며 "사람들을 하대하고 대중의 의견을 꺾등으로 흘려보내는 관료주의적인 사업태도는 우리 시대 일꾼들의 품모와 인연이 없다" 밝힘.

- 北 정부대표단(단장: 리수용 외무상), 8월 18일 아시아 방문 후 평양 도착 (8.18,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우봉생(여, 황해남도 옹진군)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8.18, 중앙통신)
- '김정은 지사'(미래과학자거리 다음해 태양절까지 건설) 관철 인민무력부 군인궐기모임, 8월 17일 현영철(인민무력부장/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8.18, 중앙방송)
- 김보현(김정은 高祖父) 생일 143주년 즈음 8월 19일 '만경대 묘'에 김정은 화환 전달 및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총 부위원장)·강석주(黨 비서)·리철만(내각 부총리) 등 헌화(8.19, 중앙통신·중앙방송)
- 선군절(8.25,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 시작일) 54주년 즈음 김정일이 '95년부터 사망시까지 17년간 "무력부문 현지도 단위수가 2,490여개에 달한다"며 "선군혁명영도 업적" 찬양(8.22,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김병국(수도건설총 위원) 등에게 '감사'(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잘 꾸리는 데 이바지) 전달(8.23, 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北 잡지 "은행, 독자경영 기업 경영활동 통제해야"(8/24, 경제연구; 연합뉴스)

- 북한의 경제 계간지 「경제연구」 최신호(2014년 3호)는 '은행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란 제목의 논문을 실고 최근 북한의 현실에 맞는 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함.
- 논문은 은행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사회주의 은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 은행에 돈자리(계좌)를 두고 화폐거래를 주로 은행을 통해 진행하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통제한다"고 밝힘.
- 한편 북한은 올해 초 평양에 조선중앙은행 본점과 대외보험총국 산하 동북아시아은행 건물을 신축하는 등 최근 은행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나. 주요 후속 조치

- 제4차 나선국제상품전시회,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선시에서 진행(8/18; 8/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나선국제상품전시회에는 北과 중국, 러시아, 이탈리아, 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출품한 70여종의 6만 4,000여 점의 전기전자 제품과 의약품 등이 전시되었다고 소개함.
- 北, 나선특구 투자환경 "생산·무역에 유리"(8/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나선경제무역지대토론회가 지난 19일 현지에서 열렸으며 토론회가 제4차 나선국제상품전시회(8월18~21일)에 참가 중인 외국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그들은 나선경제무역지대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개발실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계획을 보여주는 편집물을 시청하였다고 21일에 전함.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관계

- 北, 네덜란드 대학 농업연수 프로그램 중단(8/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네덜란드의 한 대학에서 진행하던 농업 연구원 연수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전함.

- 네덜란드 바게닝겐대학의 마텐 용스마 박사는 방송에서 북한의 농업분야 관리와 학자를 위한 이 대학의 연수프로그램이 올해 봄 학기에 잠정 중단된 후 지금은 영구히 중단된 상태라고 밝힘.

■ 北, 러시아 기업에 IT 서비스 제공 제안(8/22, 자유아시아방송(RFA))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러시아 IT 기업단체인 '정보통신·컴퓨터기술산업 협회'가 북측 요청에 따라 최근 2개월 동안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과 북한이 러시아 기업들에 정보기술(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함.
- 북한이 협회 측에 제출한 '평양광명정보기술사' 명의의 제안서는 북한이 제공할 수 있는 IT 서비스를 12개 분야로 나눠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고 RFA는 전함.

- 국가과학원 111호 제작소의 '휴대용 엽록소 측정계'(식물체의 엽록소의 함량을 빛 투과 또는 반사원리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기구) 연구·개발 보도(8.18, 중앙통신)
-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각각 100만 달러 상당을 지원(8.19, 자유아시아방송(RFA))
- 일본 돗토리(鳥取)현 사카미미나토(境港)시의 나카무라 가쓰지(中村勝治) 시장이 21일 북한의 라선시 방문 예정 (8.19, NHK)
- 북한이 정권수립일(9월 9일) 기념행사와 연계한 관광상품출시(8.19, 동방망(東方網))
- 중앙동물원 1단계 개건보수공사(50여개 대상 새로 건설·개건), 8월 18일 현재 '전반적 마감건축공사 80% 계선 돌파 및 20여개 동물사들 완공단계' 등 성과 선전(8.19, 중앙방송·노동신문)
- 자강도의 가을 누에치기에서 '봄 누에고치 생산계획 120% 초과 수행, 예성강발전소건설 청년돌격대원들의 맡은 공사 80% 초과 등 건설성과 확대, 함경남도 경공업공장들의 8월 인민소비품 생산 확대(8.19, 중앙방송·노동신문)
- 청년절(8.28) 즈음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청년들의 발명 및 새기술혁신안 출품), 8월 19일 장철(국가과학원장)·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개막사) 등 참가한 가운데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8.19,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현철(나선시 인민위 경제협조국 부국장),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제4차 나선국제상품전시회에 참가한 외국 기업가들은 호상 접촉을 통하여 효율적인 무역거래의 가능성을 토론하며 상품 수출계약도 맺고 있다'고 선전(8.20, 중앙통신)
-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 2월17일과학자들의 '27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먹이풀판 조성에 도입, 풀 생산량 증가에 기여' 선전(8.22, 중앙방송·노동신문)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도 4D 영화관 인기...신의주에 '3호점' 건설중(6/19, 조선중앙통신; 8/4, 노동신문; 8/23,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지난 4일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입체율동영화관'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보도함.
 - 북한 매체가 소개한 4D 영화관은 평양 능라인민유원지 입체율동영화관과 강원도 원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영화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며, 북한 최초의 4D 영화관인 능라인민유원지 입체율동영화관이 문을 연 것은 작년 9월이라고 연합뉴스는 23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능라인민유원지 입체율동영화관 개관 이후 '희망이여 나래치라'를 비롯한 영화 10편이 4D로 만들어져 상영됐다고

소개하였으며, 지난달 말 외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송도원국제소년단에 초청해 입체운동영화관을 비롯한 현대식 시설을 즐기도록 하며 체제 선전에 활용하기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박정주(男 62kg급 우승)·리성금·정춘희(女 48kg·53kg급 각각 종합 2위) 선수의 8월 18일 '제2회 청소년 올림픽경기대회(8.16~, 중국 난징 <南京>)' 역도경기 善戰 보도(8.19, 중앙통신·중앙방송)
- 9월5일상 전국대학생체육경기대회(8.11, 개막) 폐막식, 8월 19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진행 및 시상(8.19, 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 노동자 체육경기대회(8.20~29), 8월 20일 청춘거리 농구경기관에서 개막(8.20,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3차 전국 낚시질 애호가들의 경기, 8월 21일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진행(8.21, 중앙통신)
- 육해운성체육단의 조정·카누 등 종목별 선수들 훈련에 '새 교수훈련방법' 적용,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우승컵 4개·50여개 금메달)·전승컵체육경기대회(140여개 메달) '입상성적' 선전(8.22, 중앙통신)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데니스 블레이어 "북한 핵무기 쓰면 정권 종말 맞을 것"(8/21, 연합뉴스)
 - 데니스 블레이어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국장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를 쓴다면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해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 스스로도 대형 도발을 획책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전쟁까지 가지 않을 수준의 도발을 기도하고 있다"고 지적함.
 -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며 "김정은 정권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4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 주장함.
 -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화재개론에 대해서는 "그동안 북한과 대화를 나눠왔지만 그 결과는 계약에 불과했다"고 일축하고 "결국 북한의 체제를 바꿔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함.

나. 미·북관계

- 美國무부, 北 케리 인신모독에 "반응하고 싶지 않다"(8/21, 연합뉴스)
 - 북한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승냥이'에 비유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내놓은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우리가 반응함으로써 그 같은 발표를 가치 있게 만들고 싶지 않다"며 북한의 거듭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무시하겠다는 뜻을 밝힘.
 -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는 20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케리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보이면서도 대북 강경발언을 내놓은 것을 '가면극'에 비유하며 "흉측한 주격턱을 가진 승냥이", "마치 포악한 승냥이가 어진 양으로 변신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었음.
 - 미국 언론은 이러한 북한의 막말 공격에 대해 "이런 식의 모독은 북한의 선전꾼들에게는 값싸고 흔해 빠진 것"(포린 폴리시)이라거나 "북한이 또 다시

외교의 다리를 불태웠다"(워싱턴 타임스)는 등의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

■ 美 '금강산 관광 재개' 입장 유연해지나(8/22, 연합뉴스)

-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재무부 고위당국자는 21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해 관심을 끌고 있음.
- 한국 정부 내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과 금강산 관광 등의 남북교류가 안보리 결의안의 특정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는 최종적으로 안보리가 유권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 모두 존재하고 있음.
- 일각에서는 안보리 결의의 목적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진전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 고위당국자의 이번 발언을 금강산 관광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로 보기에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다. 중·북관계

■ 중국의 대북 원유수출 통계 7개월째 '제로'(8/22, 연합뉴스)

- 22일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7월 북한에 수출한 원유는 전혀 없었던 것을 집계되어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은 공식통계상 올해 1월부터 7개월 연속 '제로(0)'를 기록함.
- 올해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이 '0'을 이어가는 것을 놓고 북한과 중국의 냉랭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상원조 등의 형태로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됨.
- 또한 올해 원유 거래량이 공식적으로 '0'에 불과하지만 북중간 무역 규모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북중관계의 '이상신호'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음.

라. 일·북관계

- "일본 지자체장, 대북제재 부분해제 후 첫 방북" <NHK>(8/19, 연합뉴스)
 - NHK는 19일, 일본의 대북제재 시행 전 북한과의 무역이 활발했던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의 나카무라 가쓰지 시장이 오는 20일 중국 지린성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한 뒤 21일 북한의 나선시를 방문해 항구를 시찰하고, 항구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보도함.
 - 나카무라 시장의 방북은 일본이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한 이후 이뤄지는 일본 지자체장의 첫 방북사례이며, NHK는 나카무라 시장의 이번 방북은 사카이미나토시와 중국 동북부를 연결하는 새로운 국제 물류 루트를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전함.

- 조선총련의장 일본 재입국허가 받아... "방북 준비 중"(8/21, 연합뉴스)
 - 조선총련 관계자는 21일,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의장이 입국관리국으로부터 방북 후 일본에 재입국하는데 필요한 허가를 받았다고 밝힘.
 - 허 의장의 방북이 성사되면 2006년 일본이 대북 제재를 단행한 이후 조선 총련 의장의 첫 방북이 되며, 일각에서는 이번 방북단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마. 러·북관계

- "北, 러 무기박람회 참가... 무기 구매의도 주목"(8/19, 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9일, 북한이 지난주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주코브스키에서 열린 무기박람회 '2014 오보론 엑스포'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돼 무기를 구매할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주목된다고 보도함.
 - 오보론 엑스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무기 관련 국제박람회로 올해에는 11개국 300여개의 무기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됨.
 - RFA는 북한이 이번 엑스포 방문 목적을 '사업 시찰'이라고 밝혔지만 외국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으며 북한 대표단은

엑스포를 참관하고 나서 러시아에서 열리는 기계제작 관련 행사에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北, 러시아 기업에 IT 서비스 제공 제안"<美방송>(8/22, 연합뉴스)
 - 러시아 IT 기업단체인 '정보통신·컴퓨터기술산업협회'가 북측 요청에 따라 최근 2개월 동안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과 북한이 러시아 기업들에 정보기술(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2일 보도함.
 - 북한이 협회 측에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북한의 IT 전문가 67명이 러시아 기업의 주문에 따라 바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들 중에는 보안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 언어 전문가뿐 아니라 기업간 거래(B2B) 전문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이들의 월급은 1인당 약 2천 달러(약 200만원)로 제시되었다고 알려졌으며, RFA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건설과 임업 등의 분야에서 IT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바. 기타

- 유엔 안보리, '한미훈련 항의' 北회의 요청 거부(8/21, 연합뉴스)
 - 마크 라이얼 그랜트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20일(현지시간)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이 북한의 회의 개최 요청에 대한 의견을 회원국들에게 물었지만 이를 지지하는 회원국은 없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영국은 안보리 의장국으로써 이와 관련한 회의 일정을 잡을 계획이 없다고 밝힘.
- 38노스 "北, 연말 장거리 발사체 실험 가능성"(8/22, 연합뉴스)
 -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 건설 중인 로켓 발사대가 올가을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북한이 올해 연말 또 다시 장거리 발사체 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함.
 - 38노스는 북한이 최근 빠른 속도로 발사탑을 확장하고 주변 철로를 개척했으며 2012년 4월 은하 3호를 발사하기 전 언론공개를 앞두고 발사대 주변지역을

정리했던 것과 같이 발사대 근처의 노후 주차장과 인근 기차역 건너편 건물을 부수고 있다고 보도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국방 부장관 "사드-KAMD, 완벽한 상호운용성 원해"(8/21, 연합뉴스)
 -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21일, "우리는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한국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완벽하게 상호 운용성을 갖추는 것을 원한다"고 밝히면서 "KAMD가 독립적이고 강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함.
 - 또한 그는 "매우 적은 비용으로 사드와 KAMD를 상호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해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MD 체계에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불식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줌.
- 한미, 대북제재 이행 점검·대러제재 공조 협의(8/21, 연합뉴스)
 -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21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를 차례로 만나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점검하고 대러시아 제재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함.
 - 양국은 지난해 중국의 조선무역은행 거래중단 조치 이후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제재 여부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짐.
 - 또한 미국 재무부 고위당국자는 "러시아에 압력을 주기 위해 취해진 조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을 한국 기업과 은행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함으로써 러시아 제재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함.

나. 한·중 관계

- 현대연 "한중 수교 22년...새로운 전략 로드맵 필요"(8/21, 연합뉴스)
 - 현대경제연구원 천용찬 연구원은 21일 낸 '한·중 수교 22주년 의미와 협력과제'보고서에서 중국과의 교류협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함.
 - 천용찬 연구원은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양국의 무역규모는 64억 달러에서 2천289억 달러로 36배 증가했고, 교역 품목도 섬유 등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에서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경제협력이 꾸준히 강화됐다고 분석함.
 - 또한 천용찬 연구원은 "한중 양국은 협력 속에서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대비해 고급식품, 가전제품 등을 필두로 중국의 프리미엄 소비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함.

다. 한·일 관계

- "한일, '軍위안부 국장급협의 가속화 생각 공유'(8/19, 연합뉴스)
 -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9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한일관계가 풀리는데 중요한 시금석인 한일 국장급 협의가 가속화돼야겠다는 데 대해 (한일 외교장관간) 생각이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그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특정 시기를 논하기에 앞서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군 위안부 문제 협의에서의 진전이 여건 조성의 중요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그는 6자 회담국간 협의와 관련하여 "한미중 3국이 자연스럽게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면서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북한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진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함.
- 주미대사 "日 과거인정하면 관계진전...전제조건 아니라 상식"(8/20, 연합뉴스)
 -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는 19일(현지시간) "일본이 과거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일 때 한국이 관계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열릴 수 있다"며 이는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밝혔다.

- 안 대사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일은 과거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말 방한 때 강조한 것"이라며 "현재 미국 백악관, 국무부, 싱크탱크 등이 하고 있는 일은 한·일관계를 개선하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강조함.
- 또한 안 대사는 내년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지난 50년간 전체적으로 한·일관계가 굉장한 진전을 이뤘으며 앞으로도 계속 강건하게 발전해나갈 것"이라며 "과거사 인정과 함께 양국의 정상적 관계가 더욱 강화되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 유홍수 주일대사 "한일정상 만나야...日 성의보여야"(8/21, 연합뉴스)

- 유홍수 신임 주일대사는 21일 "한일관계가 예전에도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관계이기는 했지만 지금은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제 원상 또는 정상으로 회복돼야 할 시기"라고 밝힘.
- 유 대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는 것은 이미 답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라면서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어떻게 답을 주느냐가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함.
- 한일정상회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만날 의향은 다 있는 것 아닌가 한다"면서 "일본이 정상회담에 대한 답을 (내놓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전함.

■ 전 美DNI국장 "韓日, 관계개선 위해 특사 활용해야"(8/20, 연합뉴스)

- 미국의 대표적 지일파 인사인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한국과 일본이 더 이상 과거사에 집착하지 말고 고위급 특사교환을 통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는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이건 독도 문제이건 대중적으로 큰 행보는 정치적 기회주의자들에게 이용된다"고 지적하면서 "공개적 행보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특사 채널을 활용해 진정한 뜻을 전달해야한다"고 강조함.

- 또한 그는 "역사의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지만 역사를 너무 과도하게 기억하고 과거와 현재와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적 유추를 낳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며 긍정적 변화의 기회를 놓치게 한다"고 전함.

라. 미·중 관계

- "국제인권단체, 가오즈성 미국行 중재 노력"<홍콩명보>(8/19, 연합뉴스)
 - 홍콩의 명보는 19일, 미국에 본부를 둔 중국인 인권단체인 '공민역량'의 양젠리 대표가 2011년 국가 전복 선동 혐의로 수감됐다 3년 형기를 마치고 지난 7일 출옥해 중국 공안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는 가오즈성 변호사를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 미국 국무부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이 단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기회로 활용해 중국 측에 가오 변호사를 미국으로 보내 줄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중국 전투기 동중국해서 美초계기에 15m 근접비행(8/22,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22일(현지시간), 지난 18일 중국군 수호이(Su)-27 전투기 1대가 동중국해 상공에서 일상적인 감시임무를 수행하던 미 해군의 P-8 대잠초계기에 약 15m까지 근접하여 P-8 대잠초계기 위쪽에서 방향은 유지한 채 몸통을 360도 회전하는 위협비행을 했다고 밝힘.
 - 중국의 위협비행에 대해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고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역시 "매우 우려스러운 도발"이라고 비판함.
 - 중국 군사문제 전문가인 릭 피셔는 이와 관련하여 중국 인근의 미군 정찰활동 증가는 중국의 공격적인 영유권 주장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의 일부이며, 중국도 이에 맞서 일본 정찰기를 상대로 사용한 근접 비행 위협 전술을 미국 정찰기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마. 미·일 관계

- "일본, 한반도유사시 미군에 무기제공 가능해진다" <日신문> (8/20, 연합뉴스)
 - 요미우리 신문은 20일,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거나 미군 전투기에 대한 공중급유를 할 수 있도록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함.
 - 1997년 개정을 거쳐 마련된 현행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일본의 주변사태법(한반도 등 일본 주변 지역에서의 유사시에 미국·일본의 군사 협력 방안을 규정한 법률)은 자위대의 역할을 분쟁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지역에서의 수송과 보급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요미우리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대미지원 확대 방안은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으로 인해 약화될 수 있는 미일동맹의 역지력을 유지하고 미국에게 일본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센카쿠 열도에서 중일간 군사충돌이 발생했을 때 미군이 반드시 관여하게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보도함.

바. 미·러 관계

- 러 구호차량 동의없이 출발...美 "철수 않으면 추가제재"(8/23, 연합뉴스)
 - 2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할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 68대의 트럭을 일방적으로 출발시키자, 미국 등 서방은 즉각 철수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면서 러시아와 서방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음.
 -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일방적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즉각 차량과 요원들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철수시키지 않으면 추가 비용(제재)과 고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러시아 국방장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함.
 -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도 러시아의 이번 행동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주권을 침범하는 것이며, 즉각 철수하지 않으면 추가 경제제재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 정부는 이날 중으로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와 논의할 계획임.

- "美, 한·중 對러 제재 동참 못시킬 것"<러 전문가>(8/22, 연합뉴스)
 -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외교 전문가들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을 러시아 제재에 동참시키려 애쓰고 있지만 결실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함.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IMEMO)의 동양학 연구센터 소장 안드레이 볼도딘은 "한국은 러시아 시장을 잃길 원치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재에 반대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또한 현지 외교전문지 '국제정치에서의 러시아' 편집장 루키야노프는 "미국이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은 한반도 외국의 압박으로 무언가를 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미국의 압박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음.

사. 중·일 관계

- 日방위비 3년 연속 증액될 듯…센카쿠 방어력 강화(8/18,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2013년도 방위비를 11년 만에 증액하여 전년도보다 0.8% 올라간 4조 7천538억 엔으로 책정한 데 이어 2014년도 방위비는 전년도 대비 2.8% 늘어난 4조 8천848억 엔으로 책정하는 등 2년 연속으로 방위예산을 늘림.
 - 방위성은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낙도에 대한 방위력 강화를 착실히 추진한다는 계획에 따라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5대와 수륙양용차, 차기 전투기 F-35 5대의 구입비를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NHK는 전함.
 - 방위성은 이미 작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10개년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대강'을 통해 낙도에 대한 탈환 능력 정비를 강조했으며, 이러한 일본의 행보는 센카쿠 열도가 위치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됨.
- "中부주석, 중일 센카쿠 위기관리 강조"<일의원단>(8/19,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19일, 중국의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일본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중국해에서의 양국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바다와 공중에서의 위기관리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태도로 의사소통을 강화해 대립이 고조되는 것을 막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중국 정부가 그동안 센카쿠와 관련한 일본과의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국 외교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 부주석의 발언이 향후 중국 측 입장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됨.
- 리 부주석은 또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이 실현되도록 해 달라는 일본 의원들의 요청에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며 "정치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답했다고 교도는 전함.

아. 일·러 관계

- "日 잠수함, 러 영해 인근서 첩보활동하다 쫓겨나"(8/21, 연합뉴스)
 - 러시아 코메르산트지는 21일(현지시간), 자국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태평양함대 대(對)함 전력의 절반이 전날 러시아 영해 인근 동해 해역에서 첩보활동을 벌이던 일본 오야시오(Oyashio)급 잠수함을 포착해 퇴각시켰다"고 보도함.
 - 총참모부 관계자는 일본 잠수함이 사할린 섬 남단과 일본 홋카이도 사이를 가로지르는 라페루자 해협에서 포착됐다고 밝혔으며, 잠수함이 러시아의 12해리 영해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 러시아군 관계자는 일본이 최근 동해 해역에서 첩보활동을 강화했다고 전하면서 집단자위권을 용인한 일본의 헌법 해석 변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의 동해 해역 활동 강화는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분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함.
- 러, 對러 제재 동참 일본 인사들에 입국금지(8/23, 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22일(현지시간), 일본이 취한 러시아인 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다수의 일본 인사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본 인사가 명단에 포함됐는지는 밝히지 않음.
 -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러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조치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일본 외무성 간부는 러시아의 이번 보복 제재로 "올 가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일 합의를 파기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극히 어려워졌다"고 전함.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北, 美 국무 북한인권 발언 비난…“우리식 대응”(8/18,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18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북한인권 관련 발언을 비난하며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소동도 우리의 원칙, 우리 식의 대응방식으로 짓부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케리 장관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앞두고 북한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 제도가 군사적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는 국제적 인식을 축적해 저들의 군사적 위협을 합리화해보려는 정치적 기도(시도)"라고 주장했다.
 - 외무성 대변인은 "핵 문제라는 압박수단으로는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데로부터 인권문제라는 압박수단을 더 발동해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데 미국의 전략적 속셈이 있다"고 덧붙였다.
- “개성-평양 고속도로 보수 검토…고위급 대화 정례화”(8/18, 데일리NK)
 - 통일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위한 2014년도 시행계획에서 30개 세부과제, 96개 단위 사업을 보고했다.
 - 통일부, 법무부와 함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 개선 법안 관련 정부 차원의 절충안 마련 및 북한인권법 심의·통과를 지원할 계획임.
 - 외교부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공조체계를 유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조치 및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 관련 대응 등 UN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할 계획임.
 - 통일부는 북한인권 단체 관련 세미나·학술대회, 전시회·공연 및 인권실태 조사·연구 등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지원할 예정임.
 - 또한 국군포로·납북자 생사확인·상봉·송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이산가족 상봉행사 시 국군포로·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 및 상봉 비율 확대, 국군포로·납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정착금 등 지원 지속 약속도 포함됐다.

- 정부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할 예정이며, 북한 주민 생활향상 및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농축산·산림협력 등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北 "南, 윤일병 사건 주범 김관진 처벌해야"(8/19, 뉴시스)
 -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19일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해 남한 당국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엄벌에 처할 것을 거듭 요구했음.
 - 논평은 "남조선당국이 괴뢰군내 인권유린만행들의 주범인 김관진놈을 공공연히 두둔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사건조사에 나선 군부 내 검찰관계자들에게 모종의 압력을 가해 인권유린범죄의 진상을 감춰보려고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 또한 "현 정권이 악당을 비호하면 할수록 그것은 저들이 인권말살정권, 살인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며 더 큰 집권위기를 몰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북한, 꽃제비 양육 시 '식당운영권·면세' 혜택 부여(8/19, 데일리NK)
 - 북한 당국은 꽃제비를 양육하겠다고 나선 주민들에게 시장에서의 다양한 편의 제공은 물론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평안남도 소식통은 "유엔과 남조선(한국)의 지원이 끊기면서 영양실조에 걸려 매일 죽어가던 꽃제비에 관심을 두는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김정은의) 애육원 (방문) 보도가 나가면서 다시 사회적 관심이 됐다"고 말했다.
 - 소식통은 "최근 돈주(신흥 부유층)들은 고아들을 이용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40대 여성이 '방랑자 숙소'에 있는 고아 30명을 데려와 집에서 키우면서 '단고기(개고기)국집' 운영권을 받았다"고 소개했음.
 - 그러나 소식통은 김정은 체제가 꽃제비들을 위한 직접 지원을 강화한 것은 아니라고 전하며, 시장과 도심 등지에서 떠돌아다니는 꽃제비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무언(無言)의 압박으로 자금이 다소 넉넉한 돈주들이 나서게 되면서 꽃제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의 비호 아래 이뤄지는 애육원이나 돈주·무역업자들의 꽃제비 수용이 '자원봉사' 개념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데려온 꽃제비들을 돼지 축사 등에서 일을 시키고, 이들이 병이 들면 치료하기보다 애육원을 통해 건강한 아이들과 교체하려는 일도 발생하나, 이들은 처벌되지도 않고, (당국도)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는 형편임.
- 北 당국, "보위원, 올해 탈북자 1명씩 재입북시켜야"(8/19, 코나스넷)
 - 북한 당국이 지난 10일, 올해 안으로 보위원 한사람이 1인 혹은 1가족의 탈북자들을 공화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음.
 - 자유북한방송은 19일 평양소식통과의 전화통화에서 "그 안의 월남자 입북사례가 지도부(김정은)에 보고됐고 보고를 받은 지도부가 북-중국경지역의 보위원들을 격려함과 함께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 방송은 이 소식통은 보위부 관계자로 과거 국경지역에서의 탈북자 체포 및 가족 추방에 대한 소식 등을 제보한 인물이라며, 재입북자 가운데 (북한)보위부와 사전에 연계되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보위부는 개개인의 장단점을 이용해 그들의 재입북을 종용했다고 밝힘.
 - 또 '월남자(탈북자) 재입북' 관계자들에 대한 평가 사업이 보위부 내에서 진행되면서 "표창받고 승진하려면 남조선에 나간 탈북자를 데려와야 한다"는 말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탈북자를 데려오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손쉬운 방법은 북에 남은 가족을 동원하는 길이므로 남은 가족들의 삶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망했음.
- 北국방위, 케리 미국무 맹비난... "유치한 가면극 말라"(8/20, 연합뉴스)
 - 북한 국방위원회는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20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대북 강경발언을 내놓은 것을 '가면극'에 비유하며 거칠게 비난했음.
 - 국방위원회는 "미국은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가려보고 그 어디에도 통할 수 없는 역겹고도 유치한 가면극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보도했음.
 - 또한 북·미관계 '완화'의사를 밝힌데 대해서는 "마치 포악한 승냥이가 어진 양으로 변신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비꼬았음.
 -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등 대북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것을 거론하며 "1인 2역의 가면극을 펼쳐놓은 케리의 행태는 갖은 권모술수로 인류를 기만·우롱해온 미국의 체질적인 위선의 정체를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음.

- 북한, 탈북자 단속 강화... "도강 비용 크게 올라"(8/20, 미국의 소리)
 -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 경비를 강화하면서 탈북자들의 '도강 비용'이 크게 증가했으며, 탈북자 수는 김정은 시대 들어 이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함.
 -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 국경 경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탈북자에 대한 국경경비대의 책임과 처벌이 엄중해졌고 특히 국경경비대와 탈북 브로커들과의 은밀한 거래에 대한 감찰 활동이 세졌음.
 - 이런 이유 때문에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어 중국 땅으로 가기 위해 탈북자들이 브로커들에게 지급하는 비용도 김정일 시대에는 1천 달러 정도에서 지금은 많게는 9천 달러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음.
 - 한국 정부 소식통은 탈북자를 바라보는 북한 당국의 시각이 김정일 시대엔 싫은 사람은 떠나라는 식이었다면 김정은 시대엔 체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소식통은 특히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과거보다 크게 강해졌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한국의 요청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북한 당국은 탈북 자체를 미리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북 당국, 판형텔레비전 집중 검열(8/2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중국산 판형(LCD)텔레비전의 확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당국은 '109 상무'를 동원해 판형텔레비전의 외부연결(USB)단자와 원격장치들을 떼어내고 있는데 주민들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 그는 국경연선 주민들 속에서는 이번 검열이 중국 텔레비전 전파를 통한 아시아경기대회시청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이번 검열은 판형텔레비전을 통한 외부영상물(USB) 접촉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 외부영상물 접촉을 차단한다는 명목 아래 값 비싼 판형텔레비전의 부속품을 파손하는 검열성원들의 횡포가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텔레비전을 감추거나 검열성원들과 맞서 싸우는 등 수단과 방법을 다 해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 케리 장관 비하 발언에, 국무부 "대응할 가치 없어"(8/22, 미국의 소리)
 -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겨냥한 북한의 인신공격에 미국 정부는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음.

-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인신공격성 담화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그런 종류의 모독에 대해 반응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며 반응을 삼갔음.

■ 탈북자 송금 루트 차단 수수료 꺾춤(8/22,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공안기관이 탈북자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송금 줄을 차단하기 위해 금전 브로커(중개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대북 송금 수수료가 30%나 증가했음.
- 중국의 한 대북소식통은 탈북자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돈 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보위부가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음.
-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보위부가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장사를 활발하게 하는 중국 조선족 '위가네 패'가 송금 브로커로 활약한다는 정보에 이들을 중국으로 추방했음.
-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도 탈북자들의 돈을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던 재북 화교 여러 명이 중국으로 추방되는 등 북한이 최근 들어 탈북자 송금 루트 차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송금 수수료가 증가하고 있음.
- 탈북자 차 모 씨는 작년에 10~20%가량에 흥정되던 송금 수수료는 최근 무려 30%까지 올랐으나, 이는 함경북도에 국한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음.
- 대북 송금 중개상들도 북한 보위부에 발각되면 장사 집도 몰수당하고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송금에 손대기를 꺼리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도 송금선을 찾기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차 씨는 언급했음.

2. 북한 인권

■ 킹 특사, 중 관리와 북 인권 문제 논의(8/19,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는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중국 고위 관리들과 만나 광범위한 인권, 인도적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 국무부 측은 또 킹 특사가 중국에 기반해 인권, 인도적 사안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비정부기구 대표와 국제기구 관계자도 면담했다고 덧붙였다.
- 인도네시아서 북 인권 토론회 성료(8/21, 자유아시아방송)
 - 한국의 8개 북한인권단체, 탈북자, 북한전문매체 관계자 11명으로 구성된 '북한인권 합동방문단'이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북한인권 행사를 개최했음.
 -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영환 자문위원은 남북한과 균형외교를 고수해 온 인도네시아에서는 북한의 인권실태가 정확히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예술과 언론 통제 실태, 식량권과 이동의 자유 억압실태,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 등에 관한 증언에 청중들이 적지 않게 놀랐다고 설명했다.
 - 또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는 인도네시아가 더 이상 북한을 무조건 두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미 NGO '유엔 안보리, 북한 주민 보호에 나서야'(8/21, 미국의 소리)
 -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보호책임 글로벌센터'는 최근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 주민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보호책임 R2P'과 관련한 활동을 벌이는 이 단체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또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채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북한인권국제의원연맹 루마니아서 공동선언문(8/23, 연합뉴스)
 -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단체인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 연맹'(이하 의원 연맹)은 22일(현지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11차 연차 총회를 열고 북한인권 문제를 푸는 데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음.
 - 이 총회에는 한국의 이한구·홍일표·김동완·함진규(이상 새누리당)의원과 김춘진

- 의원(새정연)을 비롯해 영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 모두 16개국의 의원 32명이 참석했으며,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탈북자 강제송환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납북 문제 등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음.
- 의원들은 총회 후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의 인권 위반 실태와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심각히 받아들인다"면서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탈북자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 또 "피난처를 찾는 탈북자를 보호해주고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한편 국제의원 연맹 소속 의원들이 자국에서 북한 인권 보호법이나 결의안을 제정할 때 지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 **홍콩 북한인권영화제…“한·중 힘모아 탈북자 복송막아야”(8/24, 연합뉴스)**

- 23일(현지시간) 홍콩 성시(成市)대학에서 열린 '북한인권영화제 2014'에서 만난 탈북자 출신 정광일 동북아연구소 실장과 지현아 국제 펜(PEN)클럽 망명북한 PEN센터 이사는 한목소리로 탈북자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관심을 촉구했음.
- 영화제는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북한전략센터, 홍콩의 인권단체 탈북자관주조(North Korean Defectors Concern) 공동 주관으로 24일까지 열림.

3. 탈북자

■ **탈북자 12명 태국서 미국행 대기(8/18,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미국에 입국한 탈북여성에 따르면, 태국주재 유엔난민시설에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 대기 중인 탈북자가 현재 12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7월 말에 난민지위를 획득하고 입국한 이 여성은 "현재 10대의 탈북 소년 한 명을 포함해 여러 명이 미국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음.
- 유엔난민시설에 수용되는 탈북자들은 한국으로 가는 탈북자들과 분리되어 수용되고 있으며, 유엔 직원들로부터 난민 적격심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함.

- 美 "中체포 탈북자 11명 강제복송 안된다"(8/19, 문화일보)
 - 미국 정부는 중국 윈난성 명라현에서 중국 군인들에게 체포된 탈북자 11명에 대해서도 강제복송 중단을 촉구했음.
 - 미국의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18일 한·미 군 당국의 UFG 훈련뿐만 아니라 중국 군인들에 의한 탈북자 11명 체포에 대해 강제복송은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하프 부대변인은 "우리는 이 지역에서 중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에 탈북자 보호를 위한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상황과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음.

- "북한, 탈북자 막으려고 국경경비 강화"(8/20, 연합뉴스)
 -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북·중 국경지역 동향 관련 기사에서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압록강변에 덩게가 있는 개인용 병커를 비롯한 군사시설을 대거 신축하고 기존 시설을 보강하는 작업을 빈번하게 벌이는 등 국경지역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함.
 - 양국 국경지역 군사동향에 밝은 한 소식통은 "북한이 중국 접경지역 경비를 강화한 것은 외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내부 단속이 주목적이며 특히 탈북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음.

- 유엔 "복송 탈북자 등 18명, 지난해 북한서 자의적 구금"(8/20, 미국의 소리)
 - 유엔이 지난해 강제복송된 탈북자 등 18명을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음.
 -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다음 달에 열리는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 주민 18명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다고 밝혔음.
 - 보고서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지난해 11월 열린 세 차례 회의에서 김미래 씨 모자와 김현선 씨 모자 등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복송된 탈북자 7명을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했음.
 - 또한 지난 2012년 북한에 재입북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김일성 동상 파괴 사건, 이른바 '동까모' 사건을 폭로했던 탈북자 전영철 씨의 아들과 처남 4명, 국군포로 최상수 씨 부자, 당 간부였던 남편의 자살 후 체포된 김복실 씨 모자

3명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음.

- 이밖에 북한 체제를 비판한 혐의로 체포된 황원옥 씨와 국경수비대 무기를 훔쳐 은닉한 혐의로 체포된 최성재 씨 등 2 명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됐음.
- 실무그룹은 판정에 앞서 북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북한 정부는 관련 내용이 모두 한국 정부에 의해 조작된 정치적 음모라고 답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음.
- 보고서는 실무그룹이 북한 정부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음.

■ 이달 초 탈북한 16명 전원 무사히 태국 도착(8/21, 데일리NK)

- 이달 초 함경북도 국경을 넘은 탈북자 16명이 태국에 무사히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번에 떠난 세 가족은 중국에서 며칠 머물다가 바로 다른 나라 국경쪽으로 이동했다"면서 "탈북한 주민들과 연관이 있는 일부 주민들은 '마음을 줄이고 있었는데 다행히 무사하다는 소식이 와서 편하게 자게 됐다'면서 안심하기도 했다"고 말했음.
- 소식통은 "최근 인민반 회의에서 '한국행을 하려고 중국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잡혀왔다'며 '반역자는 무조건 잡아들이기 때문에 탈북하지 말 것'을 강조하지만 주민들은 반신반의하는 눈치"라고 전했는데, 탈북했다가 잡힌 사람이 있으면 바로 소문이 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음.
- 소식통은 "당국의 탈북자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탈북행렬이 끊이지 않자 국경지역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감시초소를 늘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주민들의 탈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음.

■ '피바다가극단 교수 탈북...이례적 검거요청 공문'(8/23, YTN)

- 최근 북한의 국가급 예술단인 피바다 가극단 소속 피아니스트 겸 교수가 중국에서 잠적해 북한이 이례적으로 중국에 검거요청공문까지 발송해 탈북자 루트를 샅샅이 뒤지면서 중국에서 체포되는 탈북자 수도 크게 증가함.
- 북한 최고의 예술단 피바다가극단 소속 피아니스트이자 평양음악무용대학의 황 모 교수는 중국 지린성 옌지 사회양성교육센터에 같은 극단 단원 30명과 함께 교육연수를 나왔다가 북한으로 돌아가기 직전 사라졌음.

- 북한은 황 교수를 쫓기 위해 이례적으로 중국에 검거요청공문까지 발송했으며, 북한과 중국 당국은 황 교수가 한국이나 외국 망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문을 강화했음.
- 실제로 중국에선 황 교수가 잠적한 직후부터 '탈북자 체포 100일 전투'란 이름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이 펼쳐지고 있으며, 탈북루트와 은신처를 급습하고 살살이 뒤지는 과정에서 체포되는 탈북자 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
- 북한이 이렇게 혈안이 돼 황 교수를 쫓고 있는 것은 황 교수 집안이 북한 고위층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음.

4. 이산가족

- 통일부,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 시행(8/22, 연합뉴스)
 - 통일부는 고령 이산가족의 유전 정보를 보관하는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음.
 - 이는 고령화돼가는 이산가족의 사후에도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앞으로 남북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함.
 -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 25일부터 사업 참가를 신청한 이산가족 중에서 고령자 순으로 1,200명을 우선 선정해 이들의 혈액, 타액, 모발 등을 채취해 부자관계와 부계, 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를 수집, 이를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임.
 -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개정 발효된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됨.
 - 또한 이산가족 1천200명을 대상으로 10분 내외 분량의 영상편지를 제작할 예정이며, 향후 남북간 협의가 되는 대로 이 영상편지를 북측 가족에 전달할 계획임.

5. 납북자

- 日, 납치피해자지원예산 증액키로...납북자귀환 대비(8/18,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납치문제 대책본부는 2015년도 예산 요구안을 금년도에 비해 증액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음.
 - 납치대책본부는 북한에서 납치 피해자들이 새롭게 귀국할 경우에 대비해 내년도에 피해자 지원에 쓸 '대책비'를 2014년도 대비 3억 엔 늘린 약 15억8천만 엔(약 157억 원)으로 신청할 방침임.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유럽 2국, 100만달러씩 대북지원(8/18, 자유아시아방송)
 - 노르웨이와 스웨덴 정부가 지난 6월에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아동기금의 북한 지원 사업에 각각 약 1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했다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국제지원금 최신 자료에 소개됐음.
 - 유엔이 지난주 추가한 국제지원금 자료를 보면, 노르웨이는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에 지난 5월 31일 미화 약 100만 달러를 기부했고 스웨덴 정부는 유엔아동기금에 지난 6월 4일 미화 91만 5천 달러를 지원했음.
 - 세계식량계획은 당시 노르웨이의 지원금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보강된 영양강화비스킷을 만들 재료를 구입했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스웨덴 정부는 지난 3월과 4월의 대북사업까지 올해 총 미화 약 4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이 지난 7월 공개한 '2014년 대북인도주의 지원개요서(Humanitarian Fact Sheet 2014)'를 보면 미화 582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임.

- WFP "내년1월 북 식량지원 멈출수도"(8/22,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내년 초부터 유엔의 대북지원 식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세계식량계획의 켄로 오시다리 아시아지역 본부장은 현재 보유한 식량으로는 연말까지만 제한된 규모의 대북식량지원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나, 2015년 1월이나 2월이 되면 영양지원 사업을 중단할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또한 북한의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영양지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원조국들의 기부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는데, 올해 말까지 5천만 달러가 추가로 확보되지 않으면 67만여 명의 북한의 2세 미만 영아와 임산부를 위한 영양강화 식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세계식량계획의 디역 슈테겐 평양사무소장도 어린이의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한 양강도와 함경북도 지역 외 다른 곳의 지원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밝힌 바 있음.

- EU, 북 재난 지원에 13만 유로(8/22,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2일 '2013-2014 북한 재난 지원 사업'에 13만 유로, 미화로는 17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번 예산이 북한의 재난 피해를 미리 줄이고 재난 관리를 더욱 효율화함과 동시에,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등에 분배됐다고 설명했다.
 - 유럽 집행위원회의 대북 사업은 주로 북한 황해북도와 평안남도를 중심으로 펼쳐져 왔으며, 북한 주민 총 2만 5천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기구는 이번 예산으로 깨끗한 식수와 위생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대북 재난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산사태나 침식을 막을 수 있는 과일 나무의 묘목들을 심는 사업, 홍수로 가옥이나 농경지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방 독을 세우는 일 등을 실시했음.

- FAO, 올해 대북사업 13건 진행 중(8/21, 자유아시아방송)
 - 식량농업기구(FAO)는 '쌀 강화 체계' 도입을 통한 쌀 생산량 증대 등 2014년

북한의 농사기술을 개선하고 정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4개 부문에서 올 하반기 모두 13건의 대북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북한의 식량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 기술 지원이 대부분임.
- 유엔의 식량농업기구가 북한에서 진행 중인 지원 사업은 크게 기술협력, 신용기금, 원격식량지원(Tele Food), 유엔개발계획 연계 사업 등 4가지로 나뉨.

8. 북한동향

-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 존 케리 美 국무장관의 '北 인권' 발언에 대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병적인 거부감과 체질적인 적대시 정책의 가장 노골적인 표현'이라며 '우리의 원칙, 우리식의 대응방식으로 짓부셔 나갈 것'이라고 위협(8.18, 중앙통신)
-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8.20)】 美 국무장관의 '북미관계 완화'의사 표시와 '북핵 및 미사일위협과 인권문제' 비판 등에 대해 '갖은 권모술수로 인류를 기만 우롱해 온 미국의 체질적인 위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라며 '미국이 평화와 인권을 입에 올리는 것은 어불성설의 극치'라고 비난 및 '유치한 가면극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라'고 충고(8.20,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